

동호안 폐기물매립지 붕괴사고 5년만에 복구 추진되는데...

당시 운영업체 사업 주도 움직임에 '시끌'

육상 이전 대신 현지 복구
광양시 소유부지 10만㎡에
추가 매립지 조성 이전키로

“어업피해 보상 등 회피
법정공방 중인 업체 안돼”
환경단체 등 거센 반발



지난 2009년 8월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붕괴된 후 임시 복구해 놓은 광양 동호안 제방.

광양시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광양시 금호동 동호안(東護岸) 폐기물 매립지 수습방식을 '육상이전' 대신 '현지안정화 복구'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사고발생 5년만에 매립지 복구작업이 본격화 수순을 밟고 있다.

“현지 안정화 복구”는 광양시 소유의 부지 9만9000㎡(3만여평)에 추가 매립지를 조성해 사고 현장인 3, 4단계 매립지(매립용량 각 22만557㎡)에 폐기물을 옮기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고당시 동호안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던 인선이엔티가 또다시 지정폐기물 반입을 통한 사업추진 주체로 나선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의 여론이 부정적이다.

◇5년간 방치한 사고현장 5년만에 현지 복구 결론=환경부와 광양시, 포스코, 인선이엔티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동호안 항구적복구 대책위 9차 회의를 열고 붕괴사고가 났던 폐기물 매립지 현장의 육상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현지안정화 복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는 육상이전이 바람직하지만 광양 인근에 이전할만한 터가 없고, 터가 있다해도 민원 등으로 지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현지안정화 복구'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광양시, 인선이엔티가 '현지 안정화 복구'를 위해 토지사용 협정을 변경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동호안 현지안정화 복구를 위해서는 광양시와 광양제철, 인선이엔티 사이에 대토(代土) 문제 해결이 관건으로



지난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이 갈라진 동호안 제방 도로를 살펴보고 있다.

부각되고 있다.

이는 동호안 사고현장 부근 광양시 소유 3만평을 인선이엔티가 제철소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인데, 토지 가격차 때문에 인선이엔티가 차액을 부담해야 매입이 가능하다.

◇공식사고 한마디 없이 사업제개 비난=그러나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광양시 간 협의로 매립지 복구를 앞두고 인선이엔티가 사업 추진 주체로 나선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업체는 사고 직후 어업피해 보상은 물론 사고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으며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동호안 폐기물 매립지 붕괴사고의 복구 책임에 대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인선이엔티와 포스코의 과실비율이 8대 2로 나

와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선이엔티 대표와 경영자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1, 2심 모두 무죄판결이 나와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매립지 차수벽(물막이벽) 손상으로 침출수가 누출돼 지금도 주변 바다가 계속 오염되고 있다”며 “당시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던 업체가 사고 이후 잘못이 없으며 5년간 법정공방만 하다가 ‘현지 안정화 복구’가 정해지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회원 A씨는 “지역사회에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는 사고책임의 핵심 업체에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광양시가 편익을 제공하려 한다”면서 “동호안

? 광양 동호안 제방붕괴 사고는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인근 해안에 조성된 매립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방.

지난 2009년 8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동호안 가운데 인선이엔티 지정 폐기물 3, 4단계 매립지 제방에 개설된 도로 200여m가 붕괴됐다.

당시 제방이 바다 쪽으로 4~5m씩 밀려나며 제방위 도로 곳곳에 균열이 생겨 매립지 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온 독성 침출수가 바다로 대량 유입됐다.

이 사고로 침출수가 주변 바다를 크게 오염시키며 국회 환경노동위가 국정감사로 다룰 정도의 최악의 환경재앙이란 평가를 받았다.

을 비롯해 광양만권 바다오염 원흉 업체의 매립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사고 이후 폐기물 ‘육상 이전’과 ‘현지 안정화’ 등 논란을 보이며 5년 여를 끌어왔다”며 “그동안 다각도의 검토결과 ‘육상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과 환경부와 협의 결과 ‘현지 안정화 복구’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답변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 관계자는 “동호안의 항구적인 안전을 위해 해당 업체가 복구를 위해 부지 확보에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현지안정화 복구’가 대안인 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매월 셋째주 토요일은 자원봉사의 날

광양시 공무원 나눔 캠페인

광양시가 ‘사랑을 함께 나누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광양시청 공무원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통해 시는 주변의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선도하며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직자 개인이 보유한 재능을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www.1365.go.kr)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지속적으로 실적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부서단위로 월 1회 이상 농촌 일손 돕기, 환경 정화 등 봉사활동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재능기부 활동에도 공무원 개인이 보유한 전문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2015년 1월말 현재 광양시 자원봉사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5만4829명(인구대비 36%)이다. 광양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 봉사단체(작은 봉사회, 다사랑회)에는 130여 명의 공직자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지적측량 기준점 7월까지 일제조사

광양시 토지경계 분쟁 방지

광양시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地籍) 측량성과의 제시와 토지경계 분쟁 방지를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 기준점에 대해 7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27점 ▲지적 삼각보조점 113점 ▲지적도근점 3612점 등 총 3752점이다.

시는 대한지적공사 광양지사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한 후 읍·동별과 노선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일제히 파악한다. 이어 결과에 따라 재설치 또는 폐기여부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제조사 결과, 각종 공사 등으로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에게 재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것 계획이다.

광양시 지적관리팀 관계자는 “도로와 인도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 및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 시행으로 망실 훼손돼 정확한 지적측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지적(측량)기준점을 부동산 종합 정보 시스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재해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남부발전 화동화력·피제이메탈 모범납세자 선정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과 (주)피제이메탈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됐다.

광양세관(세관장 김원식)은 지난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 김태우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을, (주)피제이메탈 홍득식 대표이사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

한국남부발전(주)하동화력은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기업으로 전력사업 선진화 및 저렴한 전력 공급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했으며, (주)피제이메탈은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국가 철강산업 발전



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시내지국

광천	366-8375
남광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8511
동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 062 227-9600 | 신문구독 - 062 220-0551 | 예향구독 - 062 220-0550